

북한이 선호하는 베트남식 개혁·개방, 그 특징은 무엇인가

오영일 수석연구원, 신성장/그룹사업연구센터 (youngil@posri.re.kr)

목차

1. 체제 전환국 개혁·개방 모델 비교
2. 베트남 개혁·개방 과정의 특징
3. 미국과의 관계 개선 과정
4. 글로벌 자금 유입 과정
5. 북한 개혁·개방 전망

Executive Summary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짐
 - 베트남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권력인 공산당 주도로 점진적 개혁·개방을 추진했다는 것임
 - 전면적 제도 변경보다는 특정 산업, 특정 지역에 시범 적용한 후 성과와 부작용을 비교해 확대 여부 결정
- '64년 시작된 미국 주도의 경제 제재를 풀기 위해 베트남은 '80년대 초반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지를 피력했으나 '94년 완전 해제까지 약 11년 반 소요
 - 미국은 자신들이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양보 없는 강경 입장 고수
 - 미국은 '92년 10월 1차 제재 해제 이후 '94년 2월 완전 해제까지 2년 4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제재 해제
 - '94년 2월 제재 완전 해제 후 '95년 8월 미·베 국교 수립까지 1년 반 소요
- 제재 완전 해제 4개월 전인 '93년 10월 IMF의 지원을 시작으로 MDB와 주요국 ODA, 그리고 FDI 급속 유입
 - 가장 적극적 지원을 한 ADB는 제재 전면 해제 후('94.2) 미국과 베트남 수교('95.8) 기간 중 총 30개 프로젝트에 대해 약 U\$135억 지원
 - ODA는 과거 베트남을 식민 지배했던 프랑스와 ADB 의장국 일본, 그리고 독일 등에서 연 U\$6억~11억 유입, FDI는 제재 전면 해제 후 4년간('93~'96년) 동 기간 베트남 GDP의 28%에 해당하는 U\$213억 유입
- 북한은 베트남과 유사한 면도 있지만 세습 권력, 한국이라는 특수 관계국 존재, 실질적 핵 보유국, 국제금융기구 비회원국이라는 점에서 베트남과 차이가 있음
 - 경제 발전을 위해 시장 개방은 하되 세습 권력 보호를 위해 개혁은 다소 더디게 진행되는 북한만의 변형된 방식이 될 수 있음
 - 대북 제재 문제 역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해제될 가능성 높음
- 제재 해제 후에도 북한 내 법·제도 미비와 높은 국가 리스크로 국제금융기구의 금융지원이나 주요국 ODA 지원, FDI의 본격 유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국제금융기구 정식 가입 전이라도 IBRD, ADB등의 소규모 TA(Technical Assistance) 프로그램이나 북한특별신탁펀드, IMF의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가능성 존재

1. 체제 전환국 개혁·개방 모델 비교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베트남식 개혁을 선호한다고 발언¹

○ 베트남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권력을 장악한 공산당이 점진적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했다는 것임

- 독재 정권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루려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상대적으로 매력적이며 수용하기 편한 모델일 수 있음
- '18년 11월말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베트남 응우옌 쉰언 폭 총리와 베트남 개혁·개방 모델인 도이모이(쇄신)에 관해 논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됨

□ 중국은 철저한 점진주의 개혁·개방 모델, 구소련은 급진적 Big Bang 모델인 반면, 베트남은 융통성 있는 점진주의 모델

○ 베트남은 일부 지역, 특정 분야에 '先시범적용, 後확대' 방식의 점진적 모델 추구

- 국제금융기구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IMF가 제시한 개혁 모델을 부분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Small Bang 모델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음

〈표 1〉 중국, 구소련, 베트남의 체제 전환 방식 비교

구분	중국	구소련	베트남
개방 시기	'84년	'85년 4월 페레스트로이카 '92년 가격자유화	'86년 12월 도이모이 (구소련 페레스트로이카 영향)
개혁 방식	철저한 점진주의 모델	Big Bang 모델 (급진주의)	점진주의 모델에 부분적 Small Bang 가미
주도 세력	공산당 (자율적)	미국, IMF 자문단 (타율적)	공산당 (자율적, 단, 자금 지원 위해 IMF, 세계 은행의 지원 조건 수용)
개방 직전 경제 상황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전반적 경제 상황 악화	생산성 저하 극심한 물자 부족	거시경제 악화 고물가('86년 587%) 외환 부족 소련의 경제 원조 급감
경제 시스템	사회주의 계획경제유지	시장 경제 체제 우선시	혼용: 계획 + 시장
정치 시스템	공산당 1당 체제 유지	공산당 1당 체제 붕괴 다당제 등장	공산당 1당 체제 유지
기득권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자료: 포스코경영연구원 정리

¹ Business Post, 2018.12.7

2. 베트남 개혁·개방 과정의 특징

- '86년 시행된 베트남의 개혁·개방 정책 '도이모이'는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의 비효율성에 대한 내부 반성에서 시작²
- '70년대 후반부터 생산력 저하에 따른 식량 부족, 공산품 부족으로 인한 하이퍼 인플레이션, 환율 급락 등 국가 경제 전반에 적신호 발생
 - 국가가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식량 부족은 큰 충격
 - 시장에서는 물품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데 공식 유통 시장에서는 정부 통제 가격으로 거래해야 하다 보니 공식 가격의 6~7배로 거래되는 암시장 확산
- 오랜 식민지배, 종전 후 채택한 사회주의 정책의 한계 표출
 - 58년간 이어진 프랑스의 식민지배(1885~1941년), 독립 후 남북 베트남으로 분단, 미국과의 전쟁(1960~1975년)으로 국가 경제는 이미 황폐화된 상태
 - '75년 사회주의 세력인 북베트남(월맹)이 남베트남(월남)을 점령하며 '76년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채택
 - 하지만 '80년대 초반 베트남 재정 수입의 60% 이상을 무상 지원하던 구소련의 지원 급감으로 재정난이 가중되고, 구소련이 전수한 중화학 공업 위주의 경제개발 모델도 베트남 실정에 맞지 않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³

〈표 2〉 베트남의 단계별 개방·개혁 과정

1단계: 신경제정책('79~'86)	2단계: 도이모이 도입('86~'94)	3기: 도이모이 발전기('94~)
▪ 시장 경제 체제 부분적 도입 ① 협동농장 생산 정부제 실시 - 초과 생산분 농민귀속(80% 이상) ② 국영기업 자율권 확대 - 기업의 원재료 조달, 판매가격 결정권 부분 인정 ③ 실질임금제, 배급 폐지, 외환 정책 - 실적에 따른 임금, 상여 산정 - 배급제 폐지, 모든 제품에 시장가 반영: 소매가 6-7배 인상 - 환율 절하(850%), 디노미네이션 → 부작용 있지만 성과가 더 크다는 판단으로 개혁 지속 • 유통분야 투자, 인플레이 • 농공업 생산 증가: 식량자급('83)	▪ 시장 경제 체제 도입 확대 ① 대외 개방 촉진 -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 관계개선 ② 수출, 농업 중시 정책 - 소련 지원에 따른 중공업 정책 변경 ②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 개입 축소 - 생산, 경영계획 기업에 완전 위임 ③ 국영기업 민영화, 주식화 추진 ④ 협동농장 폐지 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축소 - 소련, 코메콘 활동 대폭 축소 → 수출 증가로 외환 사정 개선되며 인플레이션 완화 등 개혁 기반 강화 • 국영 기업 소유권, 경영 능력 문제 • 민영화, 주식시장화 부진	▪ 시장 경제 체제로의 이행 본격화 ① UN, 국제금융기관, 서방 금융 지원 적극 활용 - SOC 분야 집중 투자: 도로, 전력 등 ② 미국과 국교 수립('95): 대미 수출 - ASEAN('95), APEC('98), WTO('07) 가입 등 국제 사회 본격 진입 ③ 국영기업 효율화 방안 추구 - 전략 산업 제외한 모든 분야 민간 기업에 위임: 사기업 창설 붐('99) - 주식화 본격 추진: 증시 개설('00) → 국제사회 교류 및 지원으로(FDI, ODA)로 고성장 돌입 • '90년대 중반 9% 성장 • 인플레이: '86년 775%→'95년 13%

² '86년 시행된 도이모이가 본격적 개방 정책이라면, 베트남 개혁·개방 정책의 시초는 그 이전 '79년에 도입된 신경제정책이라 할 수 있다.

³ '60~70년대 구소련은 사회주의 국가 만형으로서 사회주의 제도를 채택한 형제국에 상당한 규모의 무상 지원을 제공(베트남, 몽골, 라오스, 북한, 쿠바를 비롯한 남미 국가, 중동 지역 등)

□ 공산당 주도의 ‘先시범적용, 後확대’라는 점진적 개혁·개방 정책 선택

- 전면적 제도 변경보다는 특정 산업, 특정 지역에 시범적용한 후 성과와 부작용을 비교해 확대 여부 결정
 - 주요 부작용으로는 국영기업의 가격 자율권 확대에 의한 소매 가격 급등, 국영기업의 경영 능력 부족 등이 발생
 - 성과로는 생산성 증대로 수출이 늘고 외환 사정이 개선됐으며, 특히 농업 생산량 증가로 식량 자급을 달성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음

〈표 3〉 ‘先시범적용, 後확대’ 정책 사례

구분	先시범적용	後확대
농업 생산물 분배 정책	- 협동농장 생산 청부제 실시 초과 생산분의 80% 농민귀속	- 협동농장 제도 전면 폐지 정부 지원분 제외한 개별 생산물 100% 농민 귀속
국영기업 민영화	- 국영기업에 자율권 확대 원재료 조달, 가격 결정 권한 부분적 위임	-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 개입 대폭 축소 생산, 경영계획 기업에 일임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우방국 관계	-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축소	-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 관계개선 추진 - IMF, 세계은행과의 협력 강화

자료: 포스코경영연구원 정리

3. 미국과의 관계 개선 과정

□ '64년 월맹의 월남 침공으로 미국 주도의 경제 제재를 받기 시작

- '64년 경제 제재는 월맹(북베트남)에 국한되었지만 '75년 베트남 공산화를 계기로 적성국으로 분류되며 국교 단절 및 베트남 전역으로 제재 확대
 - 제재는 단순히 미국과의 교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외국의 ODA 지원과 IMF, 다자개발은행(MDB)의 금융 지원까지 금지하는 광범위한 조치였음
- 개혁·개방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 미국 주도의 경제 제재 해제가 절실했던 베트남이 적극적으로 유화 제스처 전달
 - '82년 10월 미군 유해 5구를 미국에 인도하며 대미 관계 개선 의지 전달
 - '84년 12월 공산당 중앙위에서 ‘전략적 외교정책’을 채택하며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의지를 공식화함

□ '80년대 초반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한 후 '95년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이루기까지 약 13년 소요

○ 미국은 자신들이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양보 없는 강경 입장 고수

- 베트남은 '88~'89년 기간 중 미국이 요구한 캄보디아·라오스 내 완전 철수 조치를 취했지만 철군에 대한 국제적 검증 절차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미국은 압박을 지속
- '91년에는 IMF, 세계은행의 베트남 지원 움직임 저지

〈표 4〉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이 요구한 선행 조건

분야	주요 내용
대외 전략	- 베트남 내 구소련 해군 기지 철수 - 캄보디아, 라오스 내 베트남군 철수
경제	- 개혁·개방 실시 - 외국인 투자 안전 보장
인도주의	- 미군 포로 및 실종자 문제 해결 - 베트남 내 25만 양심수 석방 - 국민 기본권 보장

자료: 포스코경영연구원 정리

○ '92년 10월 1차 제재 해제 이후 '94년 2월 완전 해제까지 2년 4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제재 해제

- '91년 10월 베트남이 캄보디아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세를 낮추자 그때서야 제재 1차 해제 조치 취함
- 이후 미국이 내세운 선행 조건을 지속 수용하며 제재 2차 해제('92년), 전면 해제('94년) 과정을 거침

□ '94년 2월 경제 제재 완전 해제 후 1년 반 만인 '95년 8월 양국은 국교 정상화에 이름

○ '93년 출범한 클린턴 행정부는 '기존 문제 해결을 위한 제재 강화'에서 '제재 완화를 통한 문제 해결'로 베트남 정책 전환

- '64년부터 계속된 장기 제재로 국제 사회의 피로감 확대, 베트남 진출을 원하는 미국 기업들의 요구도 미국 정부의 제재 해제 결정에 큰 영향
- 베트남 시장 자체의 매력이 부각되자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홍콩 등이 베트남과 교류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 기업들은 베트남 시장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미국 정부에 전달하며 직간접적으로 압박

〈표 5〉 베트남과 미국의 관계 개선 과정

- '80년대 초, 베트남의 적극적인 대미 관계 개선 의사 표시
- 미국은 관계 개선을 위한 선행 조건 요구
- '88년 캄보디아 내 베트남군 철군 발표 및 철군 개시 → '89년 9월 완전 철군
- 철군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 해외 차관, 기술 이전 등 기대
- 철군에 대한 국제적 입증 결여를 표면적 이유로 내세우며 '91년 10월 미국은 IMF, 세계은행의 베트남 원조 및 금융지원 제동하며 경제 압박 지속
- '91년 10월 제재 1차 해제: 베트남-캄보디아 간 평화협정 체결 → 미국과의 관계 급속 개선
- 미국은 미군 실종자 문제 적극 협력 시 2년 내 외교 관계 재개 약속
- '92년 4월, 제재 2차 해제: 인도적 차원의 무역과 비영리단체의 사업 허용, 미국인의 베트남 여행 제한 일부 해제(단체 여행, 사업 목적)
- '93년 출범한 클린턴 행정부는 경제 제재 완화로 정책 전환
 - 문제 해결을 위한 제재 강화 → 제재 완화를 통한 문제 해결
- '94년 2월 경제 제재 전면 해제
- '95년 8월 국교 정상화, '01년 미국과의 무역 협정 체결

4. 글로벌 자금 유입 과정

□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IMF와 MDB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수용하고 국내 관계 법령 제정

- (IMF) 베트남 경제 상황 실사 과정에서 그간의 정부 재정 상황, 대외 경제 활동 등 국가 경제에 대한 모든 자료 공개 요구 및 지원 조건 제시
 - IMF의 요구 자료 및 질의서에 대한 답변 제출
 - 자본주의 시스템 전환을 위한 재정, 통화, 외환 정책 전환 프로그램 수용 요구
- (MDB) 우선 지원 분야 등에 대한 합의가 담긴 국가 전략 보고서 작성을 위해 베트남 재무부와 협의
 - ADB의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IBRD의 Country Assistance Strategy
- (베트남) IMF, MDB, 각종 국제 기구로부터의 ODA 수용을 위한 관련 법률, 제도, 규정 마련

- 개방 초기 베트남 내부의 법률, 제도 미비로 국제금융기구에서 계획한 ODA 지원의 실제 집행률은 '95년까지 20% 수준에 그칠 정도로 저조('96년 이후 55% 수준으로 개선)

□ MDB와 IMF에서는 미국의 제재 전면 해제 약 1년 전부터 내부적으로 지원을 준비하였고, 첫 지원은 제재 전면 해제 4개월 전인 '93년 10월 IMF에서 수행(U\$223백만, 국제수지 보전 용도 위주)

○ MDB 중에는 ADB가 상대적으로 적극 지원, 특히 ADB 의장국인 일본이 ADB 내 일본특별신탁펀드(Japan Special Fund)를 조성하며 많은 역할 담당

- ADB는 제재 전면 해제 후('94.2) 미국과 베트남 수교('95.8) 기간 중 총 30개 프로젝트에 대해 약 U\$135억 지원
 - 30개 지원 프로젝트 중 정식 Loan 지원은 5건, 나머지 25건은 Technical Assistance(TA) 지원(건당 U\$400백만~600백만 규모)⁴
 - 25건의 TA 중 일본에서 출자한 일본특별신탁펀드를 통한 지원이 16건, ADB 자체 자금 지원 8건, 덴마크 외무부 지원 1건
- 대미 수교 후 5년간은 총 38개 프로젝트가 지원되었는데 베트남 경제의 성장에 따라 TA 비중이 줄고 Loan 비중이 늘어남('97년 이후는 TA 지원 전무)
 - 주요 지원 분야는 금융, 농업, 교육, 보건, 도로, 전력 등

○ 세계은행 그룹의 IBRD는 미·베 수교('95년 2월) 이후 적극적인 지원 개시

- 제재 전면 해제 후('94년 2월) 미국과 베트남 수교('95년 8월) 기간 중에는 단 3개 프로젝트만 승인(U\$420백만)
- 수교 후 5년간 총 24개 프로젝트에 총 U\$18.5억을 지원했으며 Loan 비중 압도적(총 20건의 Loan, 건당 지원 규모는 U\$30백만~200백만)
- 주요 지원 분야는 전력, 도로, 보건, 금융, 농업 등

○ 최빈국 지원을 담당하는 IDA는 IMF의 첫 지원이 시작된 직후 '93년 11월 U\$325백만 지원

⁴ Loan 지원은 주로 규모가 큰 프로젝트의 사업 진행 용도인 반면, TA(Technical Assistance) 지원은 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프로젝트 추진에 앞서 필요한 기초 사업 진행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Loan에 비해 건당 지원 규모가 작은 특징이 있음

- 10년 거치 40년 무이자 분할 상환 조건(연 수수료 0.75%)

□ MDB,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외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연 U\$6억~11억의 ODA 자금 유입

○ 과거 베트남을 식민 지배했던 프랑스와 ADB 의장국인 일본, 그리고 독일의 지원이 주를 이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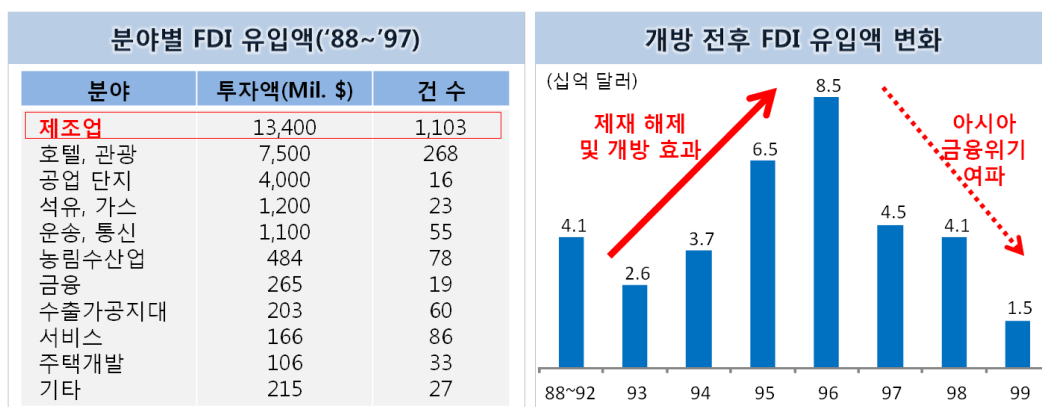
- 지원 분야는 국제 수지 보전 용도가 30%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농업, 보건, 교통, 인적자원 개발 등 다양
- ODA는 수원국인 베트남에 국가나 기관이 직접 집행을 할 수도 있고 MDB의 TA 프로그램을 통한 집행도 가능(eg. 일본의 ADB Japan Special Fund 활용)
- 일본의 ODA는 자국 내 설정된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을 활용해 초기에는 기자재 구입용 Tied Grant, 미·베 수교 이후에는 프로젝트 사업비 위주로 집행

□ 경제 제재 해제 후 4년간('93~'96년) 같은 기간 베트남 GDP의 28%에 해당하는 U\$213억의 대규모 FDI 유입

○ 투자 분야는 전체 FDI의 47%를 차지한 제조업이 압도적이며 호텔, 관광 분야가 그 뒤를 이음

- FDI 최대 투자국은 싱가포르(U\$43억), 홍콩, 일본, 한국(U\$23억), 영국, 미국, 말레이시아 순인데, 이들은 국제정치적 요인과 별개로 베트남 시장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았던 국가였다는 특징이 있음
- 미국은 경제 제재가 전면 해제된 '94년 이후 FDI 개시('94~'97년 U\$920백만)

〈그림 1〉 개방 전후 베트남 FDI 유입 추이



자료: Vietnam Investment Review(Mar. 2000), 정재완(1997), 김성철(2000)

- 개방 초기에도 FDI 유입은 많았지만 '01년 미국과 무역 협정 체결 이후 양질의 FDI 유입(세계 최대 무역국인 미국으로의 수출 관세 혜택 효과)
 - '94년 제재 전면 해제, '95년 미·베 국교 수립 후에도 미국과의 무역 협정이 없어 저임 노동력을 활용한 수출 기지로의 활용이라는 베트남 진출의 큰 매력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음
 - '95년 국교 정상화 이후 미국과의 양자 무역 협정 체결까지 약 6년 소요

5. 북한 개혁·개방 전망

- 베트남 개혁·개방 당시와 현재의 북한 상황을 비교할 때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상이한 면도 있어 베트남 방식을 준용은 하되 변형된 방식으로 개방이 진행될 수밖에 없음
- 경제 규모나 발전 수준 등에서 약소국이며 경제 발전을 위해 외국 자본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현재 북한 상황은 당시 베트남 상황과 유사
 - 베트남은 개방 직전 높은 구소련, 중국, 동유럽 등 사회주의 경제국가 위주의 대외경제 협력 구조를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교류로 적극 전환
 - 북한도 중국 일변도의 대외경제구조를 바꿔 한국, 미국, EU 등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넓히고자 함
- 북한은 세습된 권력, 한국이라는 특수 관계국 존재, 실질적 핵 보유국, 국제금융기구 비회원국이라는 점에서 베트남과 차이가 있음
 - 경제 발전을 위해 시장 개방은 하되 세습 권력 보호를 위해 개혁은 다소 더디게 진행될 수 있음
 -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 시 국제 사회의 '보상적' 지원이 마련될 가능성 큼
- 북한의 경우 개혁·개방 선언 후 본격적 외국 자본 유입까지 적어도 3~5년 걸릴 전망
- 저렴한 인건비와 풍부한 노동력은 큰 매력이나 높은 국가 리스크 때문에 제재 해제 후에도 외국인 투자가 본격 유입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외국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한 외국인 투자 보장 관련 법령, 주요 선진국 ODA 등을 받기 위한 법·제도 마련, 시장 투명성에 대한 우려 불식 필요
- 베트남 사례를 볼 때 북한을 수출 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는 북한과 미국 및 주요 선진국간의 무역 협정이 체결된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대미 관계 개선, 개방에 대한 실질적이고 투명한 의지 여부에 따라 외국 자본 본격 유입 시기는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음
 - UN 안보리 제재 및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국제금융기구 가입, 대미 수교 및 무역협정 체결 등 해결 과제 산적
 -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 시 경제 제재 해제,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허용 등이 조기 실현될 수도 있음
- 북한 개혁·개방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의 직접 지원은 제한적일 전망
 - '94년 제네바 합의 당시도 미국은 연 50만톤 경유만 지원하고 경수로 비용 U\$46억은 한국이 70%, 일본이 20%, 나머지는 EU 등 기타 국가가 부담⁵
 - '18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북 지원은 한국이 할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은 많은 돈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
- 현재 북한은 국제금융기구 비회원국인 관계로 MDB의 정식 지원은 북한 시장 개방 3년 후쯤 가능할 전망
- 대부분의 MDB들은 가입 전제 조건으로 IMF 가입을 우선 요구
 - IMF에 가입하려면 안정적인 환율정책을 펼치고 국제사회의 통화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서약 및 가입 심사에 필요한 해당국 경제상황과 통계 분석 작업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3년여 소요⁶
 - 북한의 혈맹인 중국이 주도하는 AIIB의 경우도 비회원국을 지원하려면 이사회 특별 결의를 통해 회원국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과거 북한은 ADB, IMF, IBRD 가입 신청을 했지만 거부된 사례 있음⁷
 - ADB: '97년 2월과 '00년 9월 정식 가입을 신청했으나 미국, 일본의

⁵ 제네바 합의에서 북·미 양측은 미국이 경수로 건설을 주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빌 클린턴 정부의 이 같은 합의 직후 미국 선거에서 압승한 공화당이 예산 지출을 막으면서 미국 정부는 발을 뺐다.(서울신문, 2018년 6월 4일자)

⁶ 경향비즈, 2018. 5. 9

⁷ 월간중앙, 2018. 7. 22

- 반대('97년)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00년)로 가입 거절
- IMF, IBRD: '01년 3월 가입 의사 표명했으나 여건 미조성 등의 이유로 거절
 - AIIB: '15년 2월 북한이 특사를 중국에 보내 가입 타진했으나 금융, 경제체제 수준 미달 이유로 부적격 판정
- 단, MDB 정식 가입과 별도로 미국이 주도하는 World Bank 그룹의 IBRD, 지리적으로 북한을 회원국으로 받을 공산이 큰 ADB에서 TA 지원 프로그램, 북한 신탁 펀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가능성 존재
- 과거 베트남 체제 전환 당시, 일본은 베트남이 MDB에 가입하기 전에도 ODA 자금을 투입해 자국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한 바 있음
 - 체제전환국 지원에 특화된 EBRD의 지원 프로그램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음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별첨 1] 식민, 전쟁으로 뒤덮인 베트남 역사

- 1885~1941년 58년간 프랑스의 식민지배
- 1941~1945년 일본의 베트남 침공
- 1945 년 일본의 태평양 전쟁 패배·철수
- 1945.9 월 베트남 민주공화국 선포(호치민, 공산주의)
- 1945.10~1954 년 프랑스의 재침입: 인도차이나 전쟁
- 1945 년 휴전 협정 체결로 북베트남, 남베트남으로 분단
 - * 북베트남: 호치민의 사회주의 체제
 - * 남베트남: 친프랑스/미국 세력의 민주주의 체제
- 분단 후 남베트남의 친호치민 세력인 '베트콩'의 게릴라 전투 발생
- 1960 년 미국과의 베트남 전쟁 시작
- 1975 년 4 월 북베트남이 남베트남 점령하며 종전, 미·베 국교 단절
- 1976 년 헌법상 남북 통일 이루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탄생

[참고자료]

[단행본]

정재완,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및 ODA 추진방향, KIEP, 1997

김성철, 베트남 대외경제개방 연구, 통일연구원, 2000

[보고서]

Vietnam Investment Review, Mar. 2000

[언론]

나병현, “리용호, 김정은 대신해 북한 발전모델로 베트남 공부하다”, Business Post, 2018년 12월 3일자

남성욱, “북핵 해체는 결국 돈! 누가 지갑 열까”, 월간중앙, 2018년 7월 22일자

박은하, “IMF 가입 전제 세계은행 등 북한 지원 관심’ 김동연 부총리 밝혀”, 경향비즈, 2018년 5월 9일자

이현정, “대북 지원은 투자…새 시장 北 열린다”, 서울신문, 2018년 6월 4일자